

정치주체의 변동과 국민 형성

이 나 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이 글의 목적은 정치주체에 대한 관념이 '군주'에서 '국민'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백성', '인민', '국민' 개념의 등장, 그 의미와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백성개념은 정치주체를 군주로, 인민개념은 군권을 제한하여 군민(君民)을 주체로, 국민개념은 군주를 배제하고 민(民)을 주체로 보고자 하는 시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개념들은 한국정치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와 위기의 시기였던 개화기부터 독립운동기까지 상호 공존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따라서 이 글을 그 시기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동안 축적된 한국 민주주의의 연구성과에 비하면,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 '국민'에 대한 연구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¹⁾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가 되는 민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민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였는가에 대해, 특히 정치적 격변기였던 구한말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민'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민이 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즉 정치주체로 변화되어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의 각 장은, 정치주체가 오직 국왕으로 인식되었던 것(1장)에서 군민동치를 거쳐(2장) 국민이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국가로 변화(3장)되는 과정을 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각 1절은 당시 정치주체와 관련된 배경과 주요 논리, 2절은 당시 등장한 주요 민 개념의 내용과 성격, 3절은 민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조선시대와 구한말 '민'에 대해서는, 노승원(1987), 정창렬(1991), 김운태(1994), 이석규(1996), 정용화(2000), 이나미(2001), 김동택(2002) 등의 연구가 있다.

I. 군권과 백성

1. 군권 옹호논리

조선이 일본에 실질적으로 망하기 전²⁾까지 정치의 주체가 군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선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군주가 곧 나라였으므로 군주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과 같은 것이었다. 특히 외세의 침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군권(君權)을 약화시키는 듯한 사상은 곧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사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군권을 옹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또한 광범위한 민의 지지를 잃을 염려가 없었다. 군권은 특히 위정척사파가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군주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유학 사상에 따르면 군주는 하늘의 아들이자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도록 명을 받은 사람이다. 유교의 민본사상이나 위민사상은 민이 군주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은 어디까지나 군주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 개화파의 기관지인 『한성순보』조차 서구 민주제를 군주제와 별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즉, 그 차이를 공거된 군주와 세습군주 사이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여 대통령제를 신군주제로 파악하였다(이태진 2000, 24). 당시 소개되기 시작한 입헌군주제에 대한 반대 역시 임금이 의회든 어디든 명령을 받을 수 없으며 백성의 심부름꾼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제기되었다(유인석 1913, 89-90).

두 번째로 군권옹호자들은 서양의 정치체제를 열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항로에 의하면는 기(氣)는 이(理)에 복종하는 것인데 조선은 이(理)요 외세는 기(氣)이다. 따라서 조선은 우월한 자신의 것을 지켜야 외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한 방법은 군주의 수신이었다. 즉 군주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는, 군주의 금욕적 수신(修身)이 외세 극복의 방법이었다(박충석·유근호 1982). 최익현은 “임금의 한 몸은 하늘과 땅, 신명과 사람의 주인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반드시 정신과 지기가 청명하고 안고한 연후에야 만기(萬機)에

2) 대체로 1905년을 을사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로부터 국망의식이 널리 퍼졌다.

응하여도 어지럽지 않을 것이요”라고 하였으며 “근본인즉 전하의 마음 하나에 있으니 마음이 그 바른 것을 얻게 되면, 강토가 아무리 넓고 신민이 비록 많고 사물이 비록 번다하더라도 조용히 위에 계시어 운영하시기 쉬울 것입니다”하여 무엇보다 군주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석근 1999, 125).

유인석은 군주제가 공화제보다 더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즉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어 황제로 삼아 그가 죽은 후에 바꾸는 것이 좋지, 사람을 자주 교체하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서로 뽑히려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총통(대통령)뿐 아니라 임원들도 사익을 위해 무리를 지어 싸울 것이고, 총통은 그저 아랫사람의 결정만 거두어들일 뿐 그들을 규제할 수 없으니 그들을 막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의 경우도 국민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는 국민의 힘으로 후한 봉록을 받고 자유를 혼자만 누릴 뿐 국민은 동요되고 억압을 받으니 오히려 지극히 곤궁하게 된다고 하였다(유인석 1913, 8-9).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는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주제를 대안으로 삼은 것은 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근대 공화제의 결함에 대한 그의 비판은 날카로운 것이었다.

이 당시 여론은 정당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한성순보』에 의하면, 여러 정당의 분립은 개화와 부강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이며 천하 문명의 운수는 오직 군주나 재상들이 교화를 어떻게 하는 가에 달려 있다. 이 신문은 러시아의 허무당, 영국 아일랜드의 변란당,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사회당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 당은 다 국법을 문란시키고 생민을 해독시키는 단체라고 비판하였다(한성순보 1호; 이태진 2000, 24).

셋째, 만일 개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당시 많은 이들에 의해 개혁은 군주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중국 유교의 전통 교리를 고수해서라기보다는 태조, 영·정조 등 선왕의 정치적 교훈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들 선왕의 정치를 보면 개혁은 군주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갑오농민군들은 ‘아태조(我太祖)의 혁신정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목표가 조선 건국초의 정치 즉 민본정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정창렬 1991, 135; 이석규 1996, 67). 『한성주보』(1986/7/5)에서도 “군(君)이 위로부터 법률을 밝혀 국가를 다스린다면 교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법이 날마다 질서있는 데로 진보하여 민으로 하여금 지극히 훌륭한 정치 속에

서 고무 진작” 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고종은 갑오개혁, 광무개혁 등 국왕주도의 개혁을 시도했으며, 예를 들어 통리기무아문은 국왕이 통솔하는 체제로 만들어졌다(이태진 2000, 25). 또한 공·사노비 폐지, 노비매매 금지, 과부제가 허용, 보통교육 실시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갑오개혁을 통해, 유학적 소양만을 중시하고 인사권 문제 등 많은 폐단을 불러왔던 과거제도를 폐지시키고 능력있는 사람이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백성을 신분적 차별을 통해 지배하는 것에서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재편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왕현중 2003, 262-306).³⁾

국왕의 개혁에 대한 믿음은 백성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동학교도들이 1893년 교조신원을 위해 상소를 올린 것은 국왕이 동학의 이념을 현세에 실현시켜줄 수 있는 성군(聖君)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태진 2000, 30-31).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올린 창의문에 의하면 “군신부자(君臣父子)는 인류의 가장 큰 자(者)로서 “국왕은 인민을 자애하고 신하도 현량방정으로 국왕에 익찬하는 곳에 좋은 정치가” 생긴다고 하고 있다(김운태 1994, 296).

사실상 절대왕권과 사회적 안정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그 안정이 기득권자만을 위한 안정이라면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것이나 대외적 위기 앞에 여러 세력들 간의 대립을 억제하며 민을 보호하는 강한 군주라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⁴⁾ 흔히 19세기 들어와서 권력이 민중을 수탈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법의 지배와 공화제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지만 실제로 19세기 이전에 강한 군주라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에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 이후 어린 왕, 즉 약한 군주가 계속해서 즉위하면서 이를 사육을 채우는 데 이용한 세력들이 권력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이태진 2000, 20). 즉,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조선후기의 문제는 강한 군주가 아니라 약한 군주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권에 대한 옹호는 오직 유교적인 충성심이나 애국적 동기로 주장되었

3) 갑오개혁에 대해서 일제와 개화파의 합작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당시는 비교적 일제의 간섭이 없었던 시기로서 고종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볼 수 있다. 유영익은 이 시기를 일본의 간섭이 소극적이었던 시기로 본다(유영익 1975, 55). 또한 유영익은 갑오개혁의 범안 중 사회제도 개혁에 관한 것은 일제 관리의 지도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인 스스로가 추진했던 ‘자율적’ 개혁의 결과였다고 본다(유영익 1998, 113).

4)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던 것만은 아니다. 양반이나 유림에게 있어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은 사회계급의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양반계급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때로는 군주제 강화는 개화파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대군주와 제국의 칭호는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곧 조선이 중국과 멀어지고 그만큼 일본의 조선지배에 유리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강한 군주가 반대되기도 했다.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키고 절대군주제로의 복귀를 요구했을 때 그 결과 절대군주권이 반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정 개혁을 통해 왕권이 제한되도록 압박했다(신용하 1986, 54-55). 따라서 이시기 군권의 옹호는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의 동기와 맥락, 결과를 같이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이나미 2002, 343-344).

그러나 절대왕권은 인류의 평등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지는 명백히 한계를 갖는다. 또한 기존체제의 존속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반계급이 가장 왕권을 강하게 고수하고자 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전통적 질서의 유지는 일하지 않는 양반계급을 존속시키고 이들을 정당화하므로 부의 축적과 산업발전에 저해가 된다. 또한 이들의 민에 대한 수탈을 지속시킴으로써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더구나 이들에게 있어 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민과 백성 개념은 이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2. 민·백성 개념

오늘날 민주주의의 주체인 민(民)은 본래, 사람의 한쪽 눈을 찢려 상하게 한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로, 그 뜻은 눈을 잃은 노예이다. 이같은 민의 어의가 확대되어 결국 피통치 대상이란 의미로 정착되었다. ‘백성(百姓)’은 많은 민(民)이란 의미와 더불어 본래 많은 관리(百官)를 의미했다(조법종 1996). 따라서 고려시대의 백성 개념은 일반 평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신분의 혈연적·지연적 성씨 집단을 의미했다. 이는, 고려시대 초기에 백성은 중앙권력에 흡수되지 못한 군소호적이나 그 휘하의 대중들로서 아직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향촌에서

우세한 지위에 있었던 신분이란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차차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일반민과 동일시되어가고 그 결과 백성이 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하태규 1990).

민·백성은 철저하게 통치대상으로만 존재했다. 상공(常貢)과 요역(耆役)을 부담하고, 군사동원의 주축이었으며 강제귀농되는 대상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연재해를 당하면 구제를 받고, 전투참여를 통해 많은 사상자가 나면 왕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왕을 원망하고 왕에게 원한을 갖는 존재이기도 했다(조법종 1996; 하태규 1990). 구한말에 들어서 민과 백성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지만 여전히 전통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학에서 민은 사용맥락에 따라 세가지 범주로 나뉜다. 가장 넓은 범주의 민은 천(天)과의 관계에서 쓰일 경우로서 이때의 민은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중간 범주의 민은 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왕을 제외한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가장 좁은 범주로는 '관(官)' 과 대비되는 민 개념으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범주이며 사회의 계층 구조상 하층에 속하는 민 개념이 이에 속한다. 또한 민은 '사(士)' 와 대비되어 사가 학문하는 자라면 민은 학문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이렇듯 민 개념은 그 맥락에 따라 조금씩 범주가 달라지지만 그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언제나 상하 대립적 관계에서 '하'의 측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윤천근 1996, 94-95). 구한말에 등장한 백성 개념 역시 이러한 세가지 범주를 모두 보여준다.

우리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만 벼슬 아니 하는 사람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모두 그 나라 백성이라(독립신문 1987/3/9)

위 글을 보면 한 나라에 사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였으므로 백성은 왕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특히 벼슬을 하건 안 하건 모두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강조는 역설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인식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

에 유익한 일 많이 있을 터이요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독립신문 1896/4/7)

위 글을 보면 정부에 대응되는 것이 백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백성의 관계는 수평적인 것이 아닌 수직적인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하시는 일” 또는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이라는 존대의 표현을 쓰고, 백성에 대해서는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등 하대하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이나미 2001, 111-112).

또한 백성은 유학에서 ‘사’에 대비되는 ‘민’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 “교육 없는 백성은 말로는 무슨 일이든지 남과 같이 하겠다”고 하며 “백성이란 것은 열리지 못한 나라에서는 자기에게 유조한 일을 하여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 존재이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 ‘우매한 백성의 마음’, ‘무식한 백성’,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불쌍한 조선 백성’(이동수 2003: 25)⁵⁾ 등의 표현이 자주 쓰였다(독립신문 1896/4/23, 6/26, 8/20, 9/12, 9/15, 10/3, 1897/1/26). 20세기 들어와서도 이러한 백성 개념은 지속된다. 즉 “일반 백성에致以하는 국가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治하거나 亂하거나 화가 유하거나 복이 유하거나” “我的 過問할 바가 아닌 줄로 思想”(대한매일신보 1908/7/31)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 잃은 상황에 대해 백성들이 자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임금과 관인에게 절대 충성을 바쳐야 하는 존재였다. “임금은 집안 어른이요 백성은 자식들”(협성회회보 1898/3/5; 김동택 2002, 374)이었다. “정부와 백성을 모두 거느리는 직무는 임금께 드려 임금을 머리를 삼아 가지고 백성들이 강하고 약하고 병들고 성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늙고 젊고 사나이고 여편네고 모두 합심하여 걱정하기를 우리 혼자 정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독립신문 1897/4/17)다고 생각되었다.

신민(臣民) 개념 역시 이러한 백성의 위상을 잘 나타낸다. 이 당시 군주권을 당연시하였기 때문에 신민이란 개념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심지어 독립신

5) “원이 백성을 박대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무법하게 백성을 대접한다면, 그 백성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여 사는지... 세상에 불쌍한 백성은 조선백성이로다.”(독립신문 1897/3/16)

문은 발간 목적 자체가 좋은 신민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해가 되면서도 신문을 여일히 출판하는 것은 이 신문이 경향에 집집마다 다 사람마다 읽어보고 깨달아 세상에 옳고 나라에 좋은 신민들이 될까 하여 한 일이라(독립신문 1896/10/27)

그러나 이 시기부터 전통적인 백성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고 하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으며 또한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백성마다 얼마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모라도 빼지 못하는 권리요 그 권리를 가지고 백성이 백성 노릇을 잘하여야 그 나라 님군의 권리가 높아지고 전국 지체가 높아지는 법이라(독립신문 1897/3/9)

더 나아가 백성이야말로 관인의 주인이라고 하는 언급까지 등장하여 백성의 지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

3. 애민 · 민본 사상

애민 · 민본사상은 흔히 동양의 민주적 사상으로 설명되나, 사실상 이는 민과 백성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피치자로 파악하기 때문에 등장한 사상이다.⁷⁾ 군주가 민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민의 마음이 무상하여 오직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김명하 1997, 66; 윤천근 1996, 103). 법 적용에 있어서도 관과 달리 민을 너

6) “관인이 백성을 주인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한푼이라도 그 백성의 돈을 어떻게 하던지 빼는 것만 상책으로 알며”(독립신문 1897/2/23)

7) 이러한 사상은 동양에서 제후의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위에서 생긴 사상이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가 애초부터 군이 민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유학에 애민, 위민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춘추전국시대에 제후들이 전쟁으로 점철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다수의 민중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즉 여러 계층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집단의 지지를 얻는 것보다 효과적인 자기 보전책이 없음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는 권력들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민의 위상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높게 평가된 시기이다(윤천근 1996, 104-105).

그렇게 대했는데 그 이유는 민을 무지한 존재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이석규 1996, 53). 이러한 사상에 있어 민이 최대한 주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불만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역성혁명의 조건이 되며, 도덕적 정치는 이러한 불만하는 민을 복종하는 민으로 만드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윤천근 1996, 106-107). 그리고 민의 가장 큰 저항은 ‘떠나는 것’이다.

19세기 말 개화파 역시 근대적인 ‘민권’ 보다는 ‘애민’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했다. 이러한 애민에 대한 언급이 주로 이들의 민권론을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민권론과 애민 사상은 그 출발부터 결론까지 서로 매우 다른 사상이라고 하겠다. 민권론은 서구에서, 유산자 계급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자의적 권력에 반대하여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생긴 사상이다. 그런데 개화파들은 이러한 민권은 아직 우리나라 백성에게 쉽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다(이나미 2001, 132).

또한 백성이 근본이라고 하는 민본사상은 정권교체 즉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새 정권이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그리고 민심도 기존 정권에서 멀어졌을 때, 이는 기존 군주가 천명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고 새 정권은 자신들의 집권을 천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이때 민이 천명의 근거로서 ‘근본’이 되는 것이다. 즉 민본사상은 왕권을 교체 또는 강화하기 위한 천명사상의 논리적 근거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의미있게 적용된 것이 조선의 개국이다. 즉 조선왕조는 역성혁명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고려의 멸망은 덕이 쇠하여 민심이 떠나고 따라서 천명이 떠난 것”(변계량, 『春亭集』)으로 파악하고 조선의 건국은 하늘에 순종하고 백성의 뜻에 응하는 것으로 정당화하였다(김명하 1997, 59). 이러한 조선 건국이념이 된 민본사상은 이후 지속적으로 현실정치에 실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영조의 민국론(民國論)은 이러한 민본사상을 이은 것으로 해석된다.⁸⁾

구한말 갑오개혁의 교육 이념 역시 ‘서민이 실로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이었다(『관보』 개국 503/12/13). 그러나 이때의 서민은 근대적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 충

8) “國은 民으로서 本을 삼는다. 그 때문에 국은 민에 의지하고 민은 국에 의지한다. 古語에 이르기를 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왕정이 앞세워야 할 바이다.”(『備邊司謄錄』 영조 1년 4월 24일조; 이태진 1998)

군에국의 마음을 갖는 신민(臣民)을 의미했다. 이들이 충군에국의 마음을 닦고 학식을 만국에서 널리 구하며 기예로 장점을 좇아 배움으로써 독립자주의 기초를 쌓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왕현중 2003, 307). 또한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이므로 군주는 통치자일 뿐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군사(君師)'의 책임을 가지고 신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김경미 1999, 93-96). 왕실의 안전이 신민의 교육에 있으며 국가의 부강도 신민의 교육에 있다고 하여 철저히 국왕 중심의 민본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홍집, 박영효, 박정양 등 개혁관료들이 이를 제기하고 있어 이들 역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질서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왕현중 2003, 308).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백성의 저항방법은 다소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자에 실린 '반대의 공력'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첫째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정부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므로 정부는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일을 잘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시비와 공론이 많을수록 나라가 개화된다고 하면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이유는 영국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로는 새의 날개가 공기의 압력을 받아 높이 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가 있어야 진보가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당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성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정부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시비하고 반대하여 정부가 방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는 단지 불만 하거나 떠나는 것만을 백성의 저항방법으로 제시한 전통적인 유학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동학에 대해 극렬하게 비판하여 이들을 외국군을 동원해서라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독립신문 1898/4/14).

II. 군권제한과 인민

1. 군민동치론(君民同治論)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군주는 하늘이 내려 보낸 것이지만, 18세 말에 이미 정약

용은 군주는 하늘이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이 추대해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정약용, “월목” “탕론”; 이상의 1996, 13-14). 이후 개화파들은 이러한 실학사상을 공부하고 외부로부터 서양지식을 접하면서 왕과 민이 함께 통치하는 군민동치(君民同治)체제 즉 입헌군주제를 제시한다. 유길준은 “反此하여 전국인민이 정치에 공동참여하는 자를 다인정치라云”한다고 하면서 이를 군민동치와 공화정치로 분류하였다(유길준 『세계대세론』; 왕현중 2003, 78). 이제 정치주체가 군주에서 ‘군과 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적 내용은 첫째, 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제 정치주체는 세습적인 왕이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다른 나라의 정치체도를 설명하면서 조심스레 제시되었다. 최한기는 영국에서는 민에 기반한 향신방(鄉紳房: 하원)이 정치의 중요사항을 주도한다고 하면서 구라파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따른다고 소개하였다(『지구전요』; 정용화 1998, 106). 『한성순보』는 영국의 경우 입법권이 상하원에 있다는 것(한성순보 1883/11/21), 서양의 경우 의원을 설립하여 그곳에서 결의한 것은 군주라도 자기의 뜻대로 독행할 수 없다는 것(한성순보 1884/1/3) 등을 소개하였다. 박영효는 군권이 무한하면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게 되므로 군권을 약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방국은 ‘제왕의 방국’이 아니라 ‘인민의 방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건백서; 왕현중 2003, 86).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인민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고 군주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으면 인민과 나라가 영원히 편안할 것”이라 하였고, “나라는 제왕의 나라가 아니오 인민의 나라며 제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직인이다”라 하여 국가와 군주를 구분하였다(건백서; 정용화 1998, 115-116). 유길준 역시 “국가와 왕실간의 명확한 구분이 그어져야 한다”(‘우리가 행한 개혁’; 정용화 1998, 121)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의정제대신의 선출방식도 군주에 의해서가 아닌 “인민이 천거하여 정부의 의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법률의 공도; 왕현중 2003, 95).

이는 민이 군과 함께 정치주체로 등장한 것이며, 민이 새로운 통치동반자로 된 것을 의미한다.⁹⁾ 그러나 이때 군민동치에서 민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일반

9) 또한 국가의 대세가 인민에게 있는데 이를 자유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정용화 1998, 108).

백성이 아닌 능력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인데 의원은 주로 “국중에 학문있고 지혜있고 좋은 생각있는 사람들”(독립신문 1898/4/30)로 한정되고 있다. 즉 “어떤 나라든 정치의 뜻을 품은 사람은 대개 중등이상의 인격을 갖춘 사람에 있다”(윤효정, 「대한협회의 본령」, 『대한협회회보』 1)고 생각한 것이다. 『한성순보』 역시 “국중의 현능한 자”가 자격이 있으며 인민이 지혜가 많아져야 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 이 입헌정체는 민선을 본으로 삼아 일체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국중의 현능한 자는 누구나 그 의원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나아가 재상에 이를 수 있으니 어찌 소인이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는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입헌정체의 제일이익이다. 그러나 인민이 지혜가 없으면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인민들이 지혜가 많아서 국가의 治亂과 得失의 緣由를 안 다음에야 이런 일을 거행할 수 있다(한성순보 1884/1/30).

물론 이러한 능력있는 자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뽑힐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일반 인민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개화파들의 구상에 따르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독립협회가 주장한 의회설립안을 보면 중추원 개편안에 민선위원을 모두 독립협회 사람들로 고정시켰다. 이러한 신중추원은 상원에 가까운 것으로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 아닌, 독립협회가 인민대표로서 이를 대신 선거하는 것이다(신용하 1986, 83-86, 88). 또한 이들은 하원은 급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독립신문 1898/4/7). 그러나 독립협회가 과연 인민의 대의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이미 안태원의 상소문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는 백성이란 온 천하를 두고 말하는 것이므로 모든 마을의 인구에 따라 사람을 뽑고 이들의 모임을 갖게 하여 조정의 정사를 의논해야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지 이들 민회는 장사치의 자식들에 지나지 않고 더러 외국 종교에 물들은 권세있는 자들의 집에 드나드는 자들로서 서로 모여 패거리를 지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이태진 2000, 73-74).

2. 인민(人民) 개념

군민동치론이 주장되면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 '인민'이다. 전통적으로 동양사회에서 '인'은 통치계급을, '민'은 피통치계급을 의미했다(이석규 1996, 46; 윤천근 1996, 79).¹⁰⁾ 조선시대에도 인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 일반을 가리키지만 민과 구분되어 사용될 경우 관인층만을 지칭했다(태종실록 5년 3월 癸亥條; 세종실록 7년 6월 乙丑條; 이석규 1996, 45-46).¹¹⁾ '인민'은 삼국시대에도 존재했던 용어로, 백성과 유사한 의미로 쓰였으며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되었다(조법종 1996, 89; 이석규 1996, 40). 19세기 말에는 다른 유사한 어떤 개념보다도 '인민'이 가장 많이 쓰였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백성과 유사하지만 백성에 비해 더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사용되어졌다. 예를 들면 문명화된 외국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거의 '인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신민'과 '백성'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외국의 경우라도 후진국이라고 생각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를 들면 쿠바 사람을 백성이라 표현하였으며, 미국사람들이 영국에게 천대를 받은 경우를 들어, "영국 정부에서 미국 사는 백성들을 층등이 있게 대접을" 한다고 쓰고 있다(독립신문 1896/4/7; 1896/7/7). 이는 전통적으로 지배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층을 의미하는 민 개념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인민이 지배, 피지배층을 모두 포괄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백성보다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는 국가의 구성단위로서 인민이 자주 제시되었다.¹²⁾ 즉 인민은 토

10) 은나라의 복사(卜辭)와 금문(金文)을 보면 '인'이란 존재는 주로 이종족(異種族)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조법종 1996, 88). 이후 동양사회에서 '인'은 '이종족' 또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11) 이를 보면 보편적 언어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 내 강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지배자만이 '사람'인 것으로 민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민은 노예이며 따라서 사람이 아닌 '재산'이었다. 이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영어의 man이 '남자'면서 동시에 '사람'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겠다.

12) 프랑스에서 인민은 선거인단 또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존재를 의미했다. 따라서 국민 개념이 인민보다 우위를 점한다(강경근 1987, 156).

지, 정치기구(또는 정치조직)와 더불어 국가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설명되었다. 1906년 9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만세보에 연재된 국가학에서 토지, 인민, 정치기구가 있어야 국가라고 하였고 『국민수지』의 국가는 인민, 토지, 정치조직으로 제시되었다(김동택 2002). 김대희는 『20세기 조선론』에서 인민, 토지, 군주가 합쳐야 국가라고 하여 여전히 인민은 군주와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는 다수한 인민을 통일하여 일개의 無形體를 조성하여 기 무형체가 독립의 의사로서 독립의 행위를 시위하는 자라 위할지니라”(유성준 1907. 65)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차 인민은 통일된 인민, 즉 국민 개념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강한 국민의식, 국가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민권과 민란

군권제한론이 제시되고 인민 개념이 자주 사용되면서 동시에 강조된 개념이 ‘민권’이다. 그러나 이때의 민은 백성 일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개인들 즉 ‘인’의 복수를 의미한다. 로크저작에 나타나는 ‘people’s rights’에서 people이 집단적 민중을 의미한다기보다 복수의 개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는 신체, 재산 등의 사적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민권’은 개인들 ‘인권’의 복수형태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면 관인이 무리하게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권이 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독립신문 1896/10/6). 유길준 역시 “각인의 일인 권리를 호위한 연후에 만민이 각수(各守)하는 의기를 거(擧)하여 일국의 권리를 시수(是守)하는지라”라고 하였으며 “정부의 목적은 사람의 권리와 사람의 도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람의 강약과 현우를 물론하고 각기 사람의 사람되는 도리와 신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를 귀일(歸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서유견문』; 정용화 1998, 117, 120). 박영효도 인민의 자유에 대해 신명(身命)의 자유, 일신자유라 하여 자유권 보장을 주장하였으며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급적 국법을 느슨하게 하여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좋아하는 바대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자유로운 직업선택권과 만민 평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천민층의 무조건적 해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왕현중 2003, 102-103).

그러나 전통적 사고에서 백성의 가장 큰 저항이 ‘떠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던 반면 이 시기 인민의 저항은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이 적극 권하는 저항의 방법은 ‘말하는 것’이다. “온 고을에 있는 남녀노소가 다 당한 것을 생각하여 일심으로 원에게 가서 원이 무법하게 한 말을 공손하게 경계에 마땅하게 도리에 떳떳하게 말하면 그 원이 암만 못된 사람이라도 감히 다시는 무법한 일을 그 고을 안에서 겁이나 못 할” 것이라는 것이다(독립신문 1897/8/12). 즉 『독립신문』은 “만일 정부에서 무리한 법률을 만들든지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관인이 있으면, 그것을 세계의 이치를 좇아 설명하면 정부에서도 순한 인민의 말을 더욱 두렵게 여길 터”(독립신문 1896/4/11)라고 하였다. 또한, 서양의 경우 나라에 기쁜 일, 언짢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인민들이 모여 의논, 연설, 설명하고 언짢은 일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연설하고 설명하는데, 동양에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한탄하는 내용의 글을 신고 있다(독립신문 1897/8/14). 『독립신문』은 이 글을 통해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학과 의병운동 등 민의 집단적 저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했다. “조선 백성은 언제든지 원통한 일을 당하여 마음에 미흡한 일이 있으면 기껏 한다는 것이 민란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무뢰배의 일을 행하여 동학당과 의병의 행사를” 한다고 비판한다(독립신문 1897/8/12). 비판의 이유로는, 자신들은 현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만 민란은 정부 자체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이며(*The Independent*, April 7, 1896) 개화, 서양, 일본에 반대하는, 열리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독립신문 1896/10/15). 그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민변’이라 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무식하고 조약하고 애국할 마음이 없이 어찌” 프랑스 사람들이 했던 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부디 그러한 생각들은 꿈에도 품지 말고 다만 신문과 교육으로 동포의 문견만 넓히며 우리 분외의 권리는 바라지도 말고 대황제 폐하께서 허락하신 양법미규나 잘 시행되도록 관민이 일심하면 자연 총명과 교육이 느는 대로 민권이 차차 확장이 되어 황실도 만세에 견고케 하며 국세도 부강하게 될 일을 기억하노라(독립신문 1898/7/9).

III. 새로운 정치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국가론

군주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국민이 정치주체로 등장한다는 사고는 개화기 '합중정체(공화제)'에 대한 소개에서 비롯되고 있다. 유길준은 합중공화에 대해 국민이 공화하는 정체이며 남북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정체라고 설명한다(『서유견문』 5편). 『한성순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주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양 각국에서 행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기초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는 것이다. 그 근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나라를 다스리는 법 역시 국민에게서 나와야지 한 사람이 주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중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모아 통치자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국왕을 공거(公擧)하게 된 기원이며 보좌하는 관원 역시 이런 예이다(한성순보 1884/2/7; 정용화 1998, 111).

그러나 당시 입헌군주제조차 공공연하게 주장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공화제에 관한 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The Independent* 1898/11/1).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된 것도 그들이 공화국 설립을 지지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소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독립협회 측의 중추원 의원 17명 가운데 4명이 공화제를 지지했다(신용하 1986, 66, 69).

따라서 이 당시 국민이란 말은 사용되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신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 교육방침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당시 소학교 설립 취지는 국민교육을 보급하는 것이었으나 '충군애국'을 교육자료로 삼았고 신민(臣民)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군주를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왕현종 2003, 308-310). 즉 "존주애국심을 조차(造次)에 불망(不忘)하고 국민이 일단이 되어 전심근로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국민소학독본』 개국 504년 가을). 한성사범학교 교육요지 중에도 "이 존왕애국의 지기에 부(富)함은 교원자의 중요한 바라 고로 학원으로 하여금 평소에 충효의 대의에 명(明)하며 국민의

지조를 진기(振起)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역사 수업의 목표에 대해 “본국역사는 국체(國體)에 대요를 알게 하여 국민된 지조를 양(養)함을 요지로 함“이라 하였는데 이때 국체의 대요를 알게 한다는 것은 조선의 국가체제가 전제 군주제임을 학습한다는 의미였다(왕현중 2003, 310-312).¹³⁾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과정에서 국망의식이 널리 퍼지면서 정치주체에 관한 커다란 인식변화가 일어났다. 이때 등장한 정체론은 단순히 정치개혁론의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국권회복론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이전 개화운동에서 부족했던 국가 국민 담론이 제기되었다(김명구 2004). 따라서 정치주체로서의 ‘국민’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즉 이전에 소수의 급진개화파들 가운데서 주장되었던, 군권이 완전히 배제된 국민국가론이 이때부터 대중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다. 이는 앞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대중운동이 낳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권이 상실되었으므로 군권에 대한 부정이 국권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다.¹⁴⁾

1907년에 비밀리에 창립된新民회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입헌공화제 수립을 공식목표로 정했다. 회칙인 “대한신민회통용장정”에서 본회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관습을 혁신하여 국민을 새롭게 하며, 이러한 국민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자유문명국’을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명규 1984, 117; 신용하 1986, 98-99). 『국민수지』에서는 “국가는 國民萬姓의 공동체니 君主一人의 사유물이 아니라”(국민수지 권4, 1909)고 정의내리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역시 전제봉건이 사라지고 입헌공화제가 널리 퍼지면 국가는 인민의 낙원이 되고 인민은 국가의 주인

13) 왕현중에 의하면 이러한 갑오개혁의 국민교육은 다분히 일본 메이지황제의 교육이념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한 ‘국민’이란 개념은 의무와 더불어 권리를 함께 갖는 근대국가의 주체로 간주되지 못했다. 그 의미는 군주의 지배와 의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신민으로서의 국민’이라고 정의되었다.”(왕현중 2003, 310-312)

14) 프랑스인들은 본래 자신의 출신 지역과 계급에서 정체성을 찾았으나 1789년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국민이 되었다. 이는 ‘왕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급격한 단절을 위해서였다. 즉 국가와 왕을 분리하기 위해, 국민을 만들어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구성요소인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부터 ‘국민이 국가’가 되었다(강경근 1987, 151). 유럽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혁명이 국민국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김동택 2002, 363).

이 된다고 하면서 국민적 국가가 아닌 1, 2인이 전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쓰고 있다(대한매일신보 1910/2/23; 1910/3/3).¹⁵⁾ 이후 이러한 사상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2. 국민 개념

국(國)은 중국 서주시대에 거주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한 지역의 정치군사적 중심지인 성시(城市)를 의미했다. 또한 춘추시대 국가들은 성과곽(郭)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형태였는데, 제후는 성에 거주하며 성과곽 사이에는 국인(國人)이라 불린 사람들이 거주했다. 이 국인들은 본래는 군주와 귀족들의 친척이나 후예로서 지배 계층에 속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서주시대 말기에는 민의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윤천근 1966, 80, 86-87). 우리의 경우 국민이란 용어는 삼국 시대에도 보이며, 그 의미는 특정 나라에 소속된 것을 분명히 하는 경우였다(조법종 1996, 91). 이후 조선초기에도 간혹 국민개념은 나타나는 데 주로 일반 백성을 의미한 것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소속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이석규 1996, 47, 57). 유길준은 ‘국민’을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일정한 인민의 갈래라고 하면서 족민과 구별하여 설명한다.

족민은 종족이 서로 같은 일정한 인민의 무리를 말함이고 국민은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일정한 인민의 갈래를 말한다. 족민은 인종학상의 의미로서… 국민은 법률상의 의미로서… 따라서 족민은 국가와 반드시 그 구역을 같이하지 않아 한 족민이 몇 나라에 나누어지기도 하며 한 국가가 몇 개의 족민을 포함하기도 하나, 국민은 국가와 반드시 그 구역을 함께 하여 국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종족을 불문하고 모두 한 국가의 민이니 한 국가가 몇 개의 국민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유길준 『정치학』 41-45).¹⁶⁾

15) “대저 국가를 보전하는 법은 그 국민의 국가정신이 굳은 것이 필요하거늘”(『대한매일신보』 1909. 6. 18)

16) 프랑스에서 국민은 인민전체,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인민(un peuple d'hommes identiques), ‘계급에 관계되지 않는 시민’, ‘통일되어진 인민’을 의미한다. 또한 감정, 의지, 연대가 국민이 되기 위한 요소이다(강경근 1987, 157-158, 160).

『독립신문』은 ‘국민’을 이러한 특정 거주 지역과 더불어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한다. 『독립신문』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토지를 두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권에 복종하는 인민이 많이 모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언어와 풍속과 종교와 하해와 산악들이 막힌 것을 인하여 뜻이 한가지고 서로 느끼는 정이 깊고 간절한” 것을 ‘국민의 통정’이라고 하고 있다(독립신문 1898/12/17). 이는 서양의 nation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nation은 근대국가, 영토국가의 발생과 더불어 통치의 경계가 되는 국가 또는 국민의 개념으로 애국주의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독립신문』에서는 people을 국민으로 번역하는 듯 하다. 『독립신문』 영문판에서 “This word people is a new word in Korea” (*The Independent*, August 22, 1896)라고 하였는데, 만일 people을 백성이나 인민으로 생각했다면 이를 조선에 새로운 말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⁷⁾ 이렇게 볼 때 이때의 people은 단순히 ‘사람들’을 의미하는 영미권의 people이 아닌, ‘국민’에 가까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people 개념, 또는 루소의 시민과 애국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은 이 국민(people)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에서는 새로운 말로서, 이 신문의 독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며, 또한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알 것이다. 오늘날은 조선 국민들에게 있어서 어둡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The Independent*, August 22, 1896)

또한 『독립신문』은 백성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능히 통하여 바로 세우게 함은” “나라 정략 상에 참례하는 권을 주는 데” 있다고 하면서 “시대의 변천하는 데 인하여 인민과 국민의 차등이 있다”고 하였다(독립신문 1898/12/17). 이렇게 볼 때 국민 개념은 인민 개념에 비해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식민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국민 개념은 일제와 친일파에 의해서는 친일 및 동원의 논리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는 독립과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친일파들은 구한말 시기부터 왕권 약화를 통한 국권 약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국민 개념을 강조하였다. 일본 유학생들의 글을 모은 『친목회 회

17) 당시 백성과 인민은 널리 쓰인 반면 국민은 별로 쓰이지 않았다.

보』 2호에서 신해영은 “국민의 희로(喜怒哀)”라는 글에서 국민의 노함의 정치적 중요성을 논했는데, 이 글이 정치적 민권을 논한 최초의 글이라고 한다. 이는 조선 유학생을 전담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조선의 속국화를 목적으로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신해영 외에도 유창희는 “국은 만인의 공중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국민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이태진 1997, 97-99). 합병 후 일본은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동원하기 위해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국민개병,’ ‘국민개혁’ 등의 기치를 내걸었고 소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꾸기도 했다. 일본이 이렇게 ‘국민’을 강조한 것은, 조선인에게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교육시켜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동시에 국민개념은 독립과 국가건설을 위한 논리로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민족과 국민을 정의한다.

民族이란 者는 只是 동일한 혈통에 系하며 동일한 토지에 去하며 동일한 역사를 雍하며 동일한 종교를 奉하며 동일한 언어를 用하며 (중략) 國民이란 者는 其 血統 歷史 居住 宗教 言語의 동일한 외에 又必 동일한 정신을 有하며 동일한 이해를 感하며 동일한 행동을 作하여 其내부의 조직이 壹身의 骨格과 相同하며 其對外의 情神이 壹營의 軍隊와 相同하여야 國民이라 云하나니 (중략) 고대에는 국민자격이 無한 민족이라도 可히 壹隅를 据하여 토지를 闢하여 자손을 長하며 水草를 逐하여 생활을 作하였거니와 今日에 到하여는 만일 국민자격이 無한 민족이면 大地上에 側足할 隙地가 無할지라(대한매일신보 1908/7/30)

여기서 대체로 민족은 혈통, 역사, 지리, 종교, 언어 등 혈통문화적인 공동체로서의 부분이 강조되었고 국민은 민족의 구성요소에다가 동일한 정신, 이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족이 아니라 국민에게 동일한 정신, 이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명구 2004).

3. 독립운동과 신국민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국민’ 개념이 자주 나타난 것은 1905년 이후이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대한제국의 붕괴 직전인 1907년 이후이다. 즉 국민은 국망의식이 생긴 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인민이 더 많이 쓰이기는 하나 국민이 그 전에 비해 뚜렷하게 빈번히 사용되었다(김동택 2002, 374, 378). 이는 통일된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국민정신을 통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식과 관계가 있다.¹⁸⁾ 박은식은 1905년 이후 종래의 인민의 호칭을 국민으로 바꾸고, 나아가서 국민들의 지식 향상을 위해 국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우남숙 1993, 62). 또한 학회지와 신문의 계몽 논설을 통해 양반중심의 교육에서 국민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창하고, 과거에 학문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신채호는 국민국가를, “국가관념이 발달하여 국가는 그 민의 國이 되고 국민은 그 國의 民이 되어, 국가는 국민의 共産을 作하고 국민은 국가의 公權을 有함에 至”(신채호 『身·家·國 三觀念의 變遷』)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20세기의 세계경쟁은 1, 2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민간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그 원동력과 승패의 결과 역시 1, 2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전국민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국민동포가 모두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국민론’을 전개하였다.(신채호 『이십세기신국민』) 구국민은 자신의 몸과 가족만 알고 국가는 모르는 국민이나, 신국민은 스스로 각오에 의해 새롭게 된 국민이라는 것이다.¹⁹⁾

이 당시 지식인들이 국가의식을 강조한 것은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인들에게 당시 ‘국가’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몽적 차원에서 더욱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상황은 국가의식이 사라질 경우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국가에 대해 의식적으로 교육시킬 필요에 의해서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 평등, 정의 등을 강조했으므로 국가에 대한 절대 복종만을 요구하는 국가주의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즉 신채호는 신국민의 신도덕으로서 자유, 평등, 정

18)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인도의 경우도 자치와 독립을 지향하면서 국민 개념이 형성되었다. 식민화되기 전까지는 단지 서로 각기 다른 부족의 개념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 신채호는 국민, 신국민이란 용어를 1910년 『20세기신국민』까지만 사용하였다(단 1925년에 『조선상고사』에서만 4~5번 사용했다). 국가 역시 국민과 마찬가지로 그의 저작에서 사라졌다(우남숙 1993, 95).

의, 의용(毅勇), 공공을 강조하였다(신채호 『이십세기신국민』). 첫째, 자유정신이란 잘못된 구습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자유를 잃는다는 것을 인격을 없애는 것이요, 신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유를 갈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세력계의 노예, 사상계의 노예, 현상계의 노예가 되었고 압제와 의뢰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보았다. 둘째로, 민(民)이 득보(得保)하고 국(國)이 독립(得立)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리심의 통혁(痛革)과 광신타파가 제의되었다. 사리심 때문에 민을 착취하고 군(郡)을 해하고 크게는 매군매국(賣君賣國)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류는 진화설에 의해서든 창조설에 의해서든 사람이란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설명한다. 이는 나아가 인격과 인권의 평등을 의미하였다.²¹⁾ 또한 평등주의가 행해지는 구미의 각국은 반드시 흥하였고 불평등주의가 행해진 폴란드, 인도같은 나라는 반드시 망했다고 강조되었다. 민국의 불행이 불평등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이런 형편에 이르도록 한 것은 바로 불평등으로 이것이 한국의 최대 원수라고 단정하였다. 당시까지 존재하던 불평등주의의 산물이라 할 민족간 관민간 적서(嫡庶)간의 계급주의는 망국멸민의 것으로 일절 단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국민의 정신기력을 크게 발휘하기 위해 모험, 인내, 진취, 의용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단체와 공익에 힘써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공공사상을 강조하였다(신채호 『이십세기신국민』).

또한 국민의 저항방법은 보다 적극적인 ‘무력항쟁’으로 제시되었다. 장지연은 무(武)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문명이란 한갓 문을 숭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을 구하기에 힘쓰고 무력을 함께 구비하여 문무를 병용 신장시키려 할 때 이를 문명의 실이라 할 수 있다”(장지연 「文弱之弊」)고 하였다. 박은식 역시 상무교육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된 원인의 하나가 무사(武士)를 천시하여 국세(國勢)가 허약하여져 결국 권권을 빼앗기고

20) 신채호는 이후 국가주의를 민족주의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21) “大凡 오인의 인류가 彼 창조설과 如히 상제가 창조하였던지 又 彼進化說과 如히 자연으로 진화하였던지 인류는 평등이니 연즉 강자도 人, 약자도 人, 부자도 人, 빈자도 人, 왕후 장상 영웅 성인도 人, 樵夫牧童 愚夫 愚婦도 人이라 如此히 인류는 인격이 평등이요 인권이 평등이니 오호라.”(신채호 『이십세기신국민』)

국민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박은식 「文弱之弊는 必喪其國」)고 하여 무(武)만을 숭상하는 것도 많은 폐단을 가져오지만 문(文)·무(武)야말로 천하의 두개의 대업이라고 주장하였다.

武를 숭상하는 나라는 그 폐단이 혹 살벌하여 참혹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혹은 요란스러운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나라 전부가 남에게 삼켜지지 않는 이상, 한번 난리를 치르고 나면 국세의 튼튼함이 저절로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文을 숭상하는 나라는 그 폐단이 점점 쇠해가고 차차 약해져서 마치 중한 병이 시름시름 더해가는 것과 같아서, 百脈이 모두 시들고 몸 전체가 모두 썩어서 나라 전체가 드디어는 남에게 삼키는 바가 되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그러니 禍가 뭘이 어찌 더욱 심하지 않은가(박은식 「文弱之弊는 必喪其國」)

따라서 박은식은 ‘聯武齊進’라 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의병운동과 연계해서 전진시킬 것을 주장했으며(박은식 「舊習改良論」 『西友』 제2호; 「사설」 『서북학회월보』 제1권 제15호) 의병운동을 애국운동으로 높이 평가했다(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IV.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민 개념의 변화를 개화기부터 일제강점 전까지, 민, 백성, 인민, 국민 개념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을사조약을 통한 국망의식이 싹트기 전까지 군주가 정치주체라고 하는 의식은 확고한 것이었다. 군주권 옹호와 더불어 민, 백성 개념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근본이라고 하는 애민, 민본 사상은 마찬가지로 민을 주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철저히 통치대상으로 파악한 사상이었다. 민의 정치참여란 오로지 ‘불만하는 것’이며 저항의 방법은 ‘떠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구 정치체제를 소개하기 시작한 개화 지식인들은 군과 민이 함께 정치주체가 되는 군민동치론을 소개하면서 입헌군주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백성’에 비해 보다 평등한 의미를 갖는 ‘인민’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군민동치에서

민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일반 평민까지 포함한 개념이 아니었다. 인민의 자유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들의 권리가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지배자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지만 이때의 인민의 권리 역시 개인적 권리에 한정되었다. 저항의 방법은, 보다 적극적인 ‘말하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치를 따져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화론자는 민란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1905년 나라를 실질적으로 잃게 되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주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새로운 정치주체로서 ‘국민’이 제시되었다. 국민은 정치참여와 애국심, 국권회복의 주체로서 등장하였으며 저항의 방법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싸우기’ 즉 무력항쟁까지 제시되었다.

이러한 민 개념의 변화는 민 위상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민은 단순한 피지배 계층에서 점차 민주주의와 외세 저항의 주체로 변모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 ‘백성’은 신학적 개념으로만 남아있으며²²⁾ 이는 백성이 얼마나 주권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던가를 환기시켜준다. 즉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처럼 주권자와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이다. 현재 ‘인민’은 북한이나 사회주의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소멸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경을 넘어선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적 성격에 인민 개념이 국민 개념보다 맞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은 현재 모든 국민국가에서 당연하게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서구의 경험처럼 혁명이나 전쟁을 통해 국민이 형성된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국가를 되찾기 위한 주체를 세우기 위해 국민이 등장하였다. 나라가 망한 이후 공화제 즉 국민이 주체라고 하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으며 또한 그 결과, 3.1운동과 정부수립운동에 있어서도 민주공화제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학술논문 제목 중 ‘백성’이 나타나는 문헌은 주로 기독교관련 문헌으로서 ‘하느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나라의 백성’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인민’,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어색한 것인가를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이는 인민이나 국민이 그만큼 권력관계에서 주체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관보』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서유견문』

『한성순보』

- 강경근. 1987. “헌법상 국민주권에서의 국민(Nation)의 의미.” 『법학논총』 3.
- 김경미. 1999.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동택. 2002. “근대 국민과 국가개념 수용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1.
- 김명구. 2004. “한말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워크샵 2004. 12. 9.
- 김명하. 1997. “천명과 선거.” 『전통과 현대』 1997. 가을.
- 김석근. 1999. “김옥균과 최익현: 19세기 말 ‘개국’을 바라보는 두 시선.” 정윤재 외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운태. 1994. “한국 민주주의사에 있어서의 위상.”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 집문당.
- 김현철. 2000. “박영효의 보민과 민권신장 구상.” 『정치사상연구』 2집. 한국정치사상학회.
- 박명규. 1984. “도산 안창호의 사회사상.” 『한국현대사회사상』. 지식산업사.
- 박충석·유근호. 1982. 『조선조의 정치사상』. 평화출판사.
- 신용하. 1984. “박은식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한국현대사회사상』. 지식산업사.
- 신용하. 1986.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운동.”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민족문제』. 문학과 지성사.
- 안외순. 2001. “유가적 군주정과 서구 민주정에 대한 조선 실학자의 인식: 혜강 최한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 안호상. 1956. “일민주의와 민주주의.” 『화랑의 혈맥』 창간호.
- 왕현중.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 우남숙. 1993. 『자강 독립사상연구 — 장지연·박은식·신채호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유길준. 한석태 역주. 1988. 『정치학』. 경남대 출판부.
- 유성준. 1907. 『법학통론』. 국민교육회. 1981. 아세아문화사.
- 유영익. 1975. “갑오경장을 위요한 일본의 대한정책-갑오경장타율론에 대한 수정적 비판” 『역사학보』 65집. 역사학회.
- 유영익. 1998.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일조각.
- 유인석. 1913. “우주문답.” 서준섭, 손승철, 신종원, 이애희 역. 1984. 『의암 유인석의 사상』. 종로서적.
- 윤천근. 1996. 『유학의 철학적 문제들』. 법인문화사.
-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이나미. 2002. “개화기의 정치체제 논쟁.”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 이동수. 2003. “『독립신문』에 나타난 조선 국민통합론의 한계.” 『역사와 사회』 제3권 30집.
- 이상익. 1996. “정약용 사회사상의 새로운 지평.” 『철학』 48집. 한국철학회.
- 이석규. 1996. “조선초기 관인층의 민에 대한 인식.” 『역사학보』 151.
- 이태진. 1997. “서양 근대 정치제도 수용의 역사적 성찰.” 『진단학보』 84.
- 이태진. 1998. “대한제국의 황제정과 민국 정치이념 — 국기의 제작 보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 정용화. 1998. “조선에서의 입헌민주주의 관념의 수용: 18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2호.
- 정용화. 1999. “유교와 인권(I): 유길준의 ‘인민의 권리’ 론.”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 정용화. 2000. “안과 밖의 정치학: 19세기 후반 개화개혁론에서 국권·민권·군권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조범중. 1996. “삼국시대 민·백성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 25.
- 하태규. 1990. “고려시대 백성의 개념과 그 존재형태.” 『국사관논총』 20.

Changes in Political Subject and Nation Building in Korea

Na-Mi Lee |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concept of ‘people’ in Korea, which is the major political subject of democracy today, from late 19th century to Japanese colonial period. King had been thought as the only political subject until a consciousness that Korea was declining by aggression of Japan became widespread. During this period, the concepts of ‘min’ and ‘baeksung’ were used generally. Although there were the concepts of ‘wimin’ meaning that “people must be loved” and ‘minbon’, that “people are fundamental,” their basic ideas were not to respect people but to make them be easily ruled and to justify a coup d’etat. The only way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n’ was ‘to complain’ and the way of their resistance was ‘to go away.’ In the late 19th century, some intellectuals introduced a western political system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where king and people rule their country together. From this period, ‘inmin’, which implies more equal meaning than ‘baeksung’, began to be used. But intellectuals did not think of common people as political subjects. They restricted its qualification just to educated people like themselves. Although they emphasized people’s rights, this was also limited to individual rights. They suggested the way of resistance of ‘argument’. However, people who were able to argue and had the opportunity to do it were not common people. These intellectuals distrusted the way of common people’s resistance, that is, revolution. In 1905 when Korea lost her de facto sovereignty to Japan, a slogan of republicanism appeared. A new and modern political subject, called ‘kukmin’, also appeared. ‘Kukmun’ meant people — or nation — who love their country, participate in politics, and, above all, fight for restoration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Considering this history, in Korea, modern people or nation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fighting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which distinguishes it from western experience, as the concept in this case was formed by revolution or war.